주간건설 Review

516호 2017.12.22(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주간건설 Review

CONTENTS

▣ 업계 동향

- 현대산업개발 포니정재단, 국내외 대학생 32명에 장학증서
- 현대건설, 제1회 대한민국 건설종합대상
- GS건설 자이,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종합 1위

▣ 건설경제 일반동향

- 대형건설사, 새해 공공건설수주 계획 수립 동향
-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 물량 급감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호법안, 의원 입법발의
- 공정위 조사권 남용 방지 법안, 의원 입법발의
- '재정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추진
-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 발표

◈ 현대산업개발 포니정재단, 국내외 대학생 32명에 장학증서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좌측)

○ 12월20일 포니정재단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국내외 대학생 32명에게 2018년도 장학증서를 수여하였음

○ 포니정재단은 2006년부터 매년 국내외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내 대학생 30명을 12기 장학생으로 선발해 1년간 학비 지원과 다양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는 장학증서를 전달하였음

○ 베트남에서도 활발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포니정재단은 베트남 초청 장학생과 교환 장학생 각 1명에게도 장학증서를 수여하였음

○ 초청 장학 사업은 기존 포니정 베트남 장학생 중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을 뽑아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포니정재단은 지난 2005년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도전정신과 인재 중시 철학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날 행사에는 정몽규(사진 왼쪽)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포니정 장학생과 가족·친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음

◈ 현대건설, 제1회 대한민국 건설종합대상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국내 건설업계의 '맏형' 현대건설이 '2017 대한민국 건설상'에서 종합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음

○ 동아일보와 채널A는 12월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회 '대한민국 건설상' 시상식을 열고 현대건설을 첫 종합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였음

○ 대한민국 건설상은 혁신적인 신기술과 경영 활동을 통해 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사를 격려하고 한국 건설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끌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올해 처음 제정한 상임

○ 한편, 이날 건축부문 대상은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이, 주택부문 대상은 대우건설과 GS건설이 공동 수상하였으며, 토목부문 대상은 포스코건설이, 부동산개발부문 우수상은 삼중E&C가 수상하였음

◈ GS건설 자이,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종합 1위

○ 부동산114가 지난 11월 3~28일 전국 성인 남녀 1572명에게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 내 건설사 중 '2017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를 실시해 지난 12월18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자이 브랜드가 종합부문 1위에 올랐음

○ 자이는 종합 부문 6개 항목 중 3개인 선호도(21.6%), 최초상기도(26.9%), 투자가치(23.9%)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건설사상기도(15.5%)와 신뢰도(9.4%)는 2위, 주거만족도(77.4%)는 3위에 올라 종합 1위를 차지하였음

○ GS건설은 일부 건설사들이 최근 들어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 진출을 위해 프리미엄 브랜드를 따로 런칭하고 있지만 GS건설은 자이(Xi) 브랜드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며 2002년 9월 론칭한 Xi는 eXtra intelligent(특별한 지성)의 약자로, 고객에게 특별한 삶의 수준을 경험하게 하는 고품격 아파트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하는데 성공했고, 현재까지도 고급 아파트 브랜드의 대명사로 인식돼 브랜드 경쟁력에서는 확고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대형건설사, 새해 공공건설수주 계획 수립 동향

○ 12월18일 건설경제신문이 주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사들이 내년 공공시장 수주 목표액을 올해보다 줄이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으로 수립중인 것으로 나타남

<주요내용>

❒ 주요사 수주목표 동향

- 정부의 SOC예산 축소와 공공공사의 수익성 저하에 따라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사들이 전년대비 하향 또는 비슷한 수준의 수주계획을 수립 중

<주요사 2018년 공공건설수주 목표>

(단위 : 억원)

업체명	업체명	2017년 목표	2018년 목표
수주목표 하향 조정	현대건설	13,000	11,000
	대우건설	14,000	9,000
	계룡건설	10,000	8,250
수주목표 유지	GS건설	9,000	9,000
수주목표 상향 조정	대림산업	7,000	8,500
	포스코건설	5,580	5,830
	한화건설	4,200	5,050
	태영건설	6,000	6,200
	금호건설	4,500	5,000

자료 : 건설경제신문(12/19日字 참조)

❒ 내년도 공공수주 전략

- 전체적으로 주요 건설사들의 내년도 공공수주 목표는 올해 목표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보수적 계획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내년도 SOC예산이 대폭 감소된 것을 감안하면 최대한 신규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공격적 수주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해 보임
- 이에따라 대형사들의 공공수주 목표는 향후 △발주기관별 사업물량 확정 △입찰제도 변동 △사내 조직 변화 등에 따라 목표액이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보임

- 대형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올해 목표보다 낮은 수준의 공공수주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공건설수주에서 강세를 보여 온 계룡건설도 내년도 공공건설수주 목표를 낮춰서 설정하였음
- 이들 건설사들외에 대형건설사들의 경우에도 내년도 공공건설수주 목표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향조정하는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해 SOC 물량 축소에 대비하고 있음
- 다만, 이들 대형사들은 보수적으로 수주 목표를 잡은 가운데, 수주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보다 기술형 입찰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현대건설은 내년 수주 목표액의 60~70%가량을 기술형 입찰에서 수주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대림산업, SK건설 역시 내년 기술형 입찰 시장에 올해보다 참여를 늘리는 등 공격적인 수주전략을 구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기술형입찰시장에서 대형사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임
- 이런 가운데, 중견사들의 경우 줄어든 SOC 물량을 대신해 새 정부가 제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 건설부문에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견건설사들은 내년 LH가 집행할 기술공모형 방식의 공공임대리츠, 시공책임형 CM과 순수내역입찰 대상 공사 등 기술형 입찰 물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그 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수주 물량 확보를 위해 시장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 물량 급감

○ 대형공사 발주물량을 예측할 수 있는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 물량이 내년에는 올해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어서 내년 대형공사 발주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주요내용>

- 조달청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총사업비 대상사업 실시설계 단가검토 대상 사업을 조사한 결과, 내년 총사업비 검토 물량은 금액기준으로 3조9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올해 검토실적 8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50% 넘게 급감한 것이며, 총사업비 검토실적이 가장 많았던 2014년 10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3수준에 불과함
- 조달청은 이같이 내년 예정사업이 크게 줄어든 이유로 정부 예산편성때 신규 발주 등 SOC 예산 감축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총사업비란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모든 경비로,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정부 예산 보조를 받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사업 중 500억원 이상 토목공사,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 집행전에 조달청의 총사업비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 물량을 통해 당해 대형공사 신규 발주 물량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음

<기관별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 물량 추이>

(단위 : 억원)

기관	2017년	2018년	증감액
도로공사	41,476	7,268	-34,208
철도공단	23,508	23,762	254
농어촌공사	4,462	5,143	681
수자원공사	3,047	0	-3,047

◈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호법안, 의원 입법발의

○ 11월27일과 12월7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제윤경 의원은 각각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11.27) 법안>

❒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완화

- (현행)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 ⇒ (개정안)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 확장

- (현행)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 (개정안)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12.7) 법안>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원칙적 차단

- **단순한 기술'유출' 자체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되도록**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 이는 현행 하도급법으로는 기술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용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사업자 기술보호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른 것

◈ 공정위 조사권 남용 방지 법안, 의원 입법발의

○ 12월20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남용 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주요내용>

❒ 발의 배경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시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공정거래 위반행위 조사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피조사자의 사업장 정규 근무시간 내에 해당 사업지의 소재지에서 필요 최소한의 기간 내에 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의견을 들은 후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려는 경우에는 영치조서를 교부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서면에 기재된 기간 내로 하고, 조사가 종료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이후의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리도록 함
- 피조사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호관을 두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과 관련해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 대해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실태조사를 할 경우 조사대상자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조사결과 공표 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료 제출 요구의 목적, 범위 및 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토록 함

◈ ‘재정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추진

○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 고속도로’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 중

○ 이는 민자 고속도로에 이어 ‘재정 고속도로’의 경우도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모든 재정 고속도로 구간을 하나의 도로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와 통행료 체계, 감면제도 등을 손질하는 것이 기본방향

<‘재정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추진방안>

❒ **통합채산제 개선**

- 그동안 ‘재정 고속도로’는 신규 고속도로 수요 증가에 따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유료로 운영하고, 후발 노선의 과도한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

기 위해 통합채산제를 적용

- 그러나, 최근 들어 신규 건설 수요가 감소하면서 현행 유료운영 체계의 실효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국토부는 통행료 수입이 투자비를 초과한 노선의 처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경인선, 경부선, 울산선, 호남선 지선 등이 그 대상

❒ 통행료 체계 및 감면제도 개편

- 혼잡 시 요금 할인 등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통행료 체계를 보완하고, 화물차 할인 등 감면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함

❒ 민자 고속도로의 운영체계와 비교·분석

- 민자 고속도로와 재정 고속도로의 운영체계를 비교·분석하는 것도 '재정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 추진 방안의 일환

◈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 발표

○ 12월19일 조달청은 건설산업 관련 조달행정 개선방안이 포함된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발표

○ 조달청은 건설산업 관련 방안 중 '시방서 작성부담 완화'만 2019년 이후까지 개선을 추진하고, 나머지 방안들은 2018년까지 개선 추진을 완료할 계획

<주요내용>

❒ 공사원가 제비율 적정성 제고

- 조달청은 지난 5월 '예정가격 산정방법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현재 수행 중이고, 용역결과는 이르면 연내 나올 예정이며,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사원가 제비율의 상향을 추진할 계획

  * 제비율 :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이윤, 기타경비 등 간접비 요율

❒ 노무비 작성 가이드라인 제공

- 수요기관에 노무비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노무비 부당삭감을 방지하고, 공사원가검토 시 노무비 정상 반영여부 확인

❒ 하자사례 DB 구축 및 활용

- 공사 하자의 원인, 조치 및 방지대책 등 하자사례 DB를 구축·활용하고, 공공·민간 시설사업 전반에 활용되도록 하자정보 공개

❒ 시방서 작성 부담 완화

- 표준시방서를 보완한 '조달청 가이드시방서'를 작성·제공하고, 표준시방서 포함 내용은 시방서 작성에서 제외하여 부담 완화
- 공사현장에서 온라인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BIM 적용 확대**

-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3차원 모델기반의 설계선진기법(BIM)* 적용 확대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 :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쳐 3차원 모델 기반의 디지털 기술서비스 제공

- BIM 수준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공공건축물 설계관리를 BIM 기반으로 전환

❒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 담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재검토하고, 통보절차 개선* 및 전담인력 배치 등 운영체계 개선

  * 공정위와 협업을 강화하여 담합건 의결에 대한 통보를 신속화

❒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활성화**

-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예산및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반영 협의

  * 하도급 지킴이 : 공공조달과정에서의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